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주요 내용

# 올 중3부터 수능과목 5개로 축소

## 대학정보공시항목 공개로 책무성 강화 수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1단계로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 뒤 2단계로 수능과목을 축소하고 3단계에서는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겨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수위는 대입제도의 일대 변화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재 고3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등급제 보완, 학생부 및 수능반영 비율 자율화 이외에 제도적 변화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 ① 백분위·표준점수 공개

수능등급제 보완, 대학자율화 조치, 대학책무성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수능등급제 보완은 올해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9학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현재 과목별 등급(9등급) 외에도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가 모두 병기된다. 수능등급제는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인수위는 “수능등급제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커 올해부터 보완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입자율화 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지금까지 반영비율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이 입시 직전까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교육부가 명문화된 근거로 반영을 강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행정적 조치없이 즉시 자율화가 시행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교육부의 대입전행 기본 계획 수립기능을 올해 상반기에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올해 5월까지 개정기로 했다. 이 경우 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행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입학년도에 전년 3월 까지 발표해야 한다.

대학의 책무성 강화도 1단계 조치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인수위는 우선 학생 다양성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하기로 하고 2009학년도부터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층원 결과 등을 대학 정보공시항목으로 공개토록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22일 서울 삼성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200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영역별 등급 외에 백분위와 표준점수, 그리고 원점수 등을 함께 공개한다는 내용의 수능등급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대입자율화로 인해 본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를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 ② 선택과목 2개로 제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입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2011년 연말 실시)부터 현재 학생당 평균 7개인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한다. 과목은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선택 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 문항수와 응시 시간은 늘리기로 했다. 또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재은행식 상시 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 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 부터 적용된다.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은 여러 번 응시를 볼 수 있으며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한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험실시할 예정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③ 학생선발 완전 대학 자율

대입 완전자율화 단계로, 2012년 이후 추진대상이다. 인수위는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인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이 명문화되고 필요한 법령도 정비된다. 또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된다. /연합뉴스

# 정부 40년만에 입시서 손 떼다

## ■ 대입 어떻게 바뀌었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12년 이후 대입입시에서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는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완성하겠다고 22일 발표함에 따라 대입 제도는 약 40년만에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다시 벗어 나게 될 전망이다.

해방 후 가장 먼저 등장한 대입 제도는 대학별 단독 입학시험(1945~53년)이다. 초기에는 지원자가 갈대 부족해 정원미달 사태가 속출했으나 몇 년 후 자율권을 악용한 정원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허가가 남발하는 등 입시부정이 판을

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1969~80년)가 실시됐으며 초·중·고 학생을 입시지역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68년)와 고교입시 과외를 막으려는 고교 평준화정책(73년)이 차례로 도입됐다.

그러나 예비고사가 단편적 지식 위주의 선택형이었던 반면 본고사는 국영수 등에 집중된 고학력 경쟁고사 성격이어서 고교과외가 성행하고 빈부가 위화감이 커지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 ‘교육정상화 및 과외과외 해소방안’이 발표됐고 이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대학입학 예

## 45년 대학별 단독입학시험

## 69년 예비고사·본고사 실시

## 80년 학력고사와 논술 병행

## 94년 현 수능시험체제 도입

비고사(학력고사)와 고교내신(논술) 병행 실시제였다. 그러나 학력고사 과목수가 차츰 늘면서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고 극심한 눈치치전, 학교 간 서열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자 ‘선 지원, 후 시험’ 방식(1988~93년)이

해결책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입시부정 사태가 잇따르고 학력고사가 암기식 입시위주 교육을 유발한다는 비난이 일자 학력고사 시대는 1993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학력고사의 뒤를 이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것이 지금의 수능시험 체제(1994~현재)다.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따라 97년부터 대학별고사는 논술을 제외하고 폐지됐고 내신도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됐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공교육 부활을 위해 학생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1994년 교육혁신위원회가 ‘수능 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수능 등급제가 시행됐지만 이 역시 시행 1년 만에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연합뉴스

## ■李당선인 교육개혁 드라이브 왜?

정부 조직개편을 일단락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그동안 벌려온 ‘대입 자율화’ 카드를 꺼내두고 교육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교육문제를 먼저 풀지 못하고는 서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기 어려울 뿐더러 이명박 정부의 지상과제인 경제 살리기도 ‘체감효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게 이명박 당선인의 상황인식이다.

특히 이 당선인은 교육정책을 교육 그 자체보다도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얘기다. 한 측근은 “경제와 교육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MB(이명박)식 국정운영의

양대축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교육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로 요약된다. ‘전북대’로 상징되고 있는 규제 만능주의의 집국을 풀어 대학과 고교가 스스로 최선의 해답을 찾도록 한다는 구상에 터잡고 있다. 시장과 자율, 경쟁원리를 중시하는 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 당선인의 이 같은 구상은 수능등급제의 사실상 폐지와 대입의 단계적 자율화로 구체화했

다. 특히 수능 성적표에 영역별 등급(1~9등급)만 표기함으로써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능등급제에 대해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사실상 폐지시켰다. 참여정부가 대학들의 ‘점수위주 전형’ 관행을 수능등급제 도입을 통해 완화하려던 시도가 시행 1년만에 백지화된 셈이다.

이 당선인은 그 대신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로드맵을 내놓으며 대학에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은 2010

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대입 자율화의 단계적 작업에 착수해 2012학년도에는 자율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인 셈이다.

당초 이 당선인측이 2월초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돌연 앞당긴 것은 대입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정부 개혁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 성장·양극화 해소 ‘두 토끼 잡기’